

2021년 국제정세 전망

본 보고서는
국내·외 연구기관의
'21년 정세전망을
종합·비교·분석한
결과물입니다.

2021. 1.

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

목 차

I. 2021년 국제 정치·경제 개관

II. 한반도 정세

가. 북 한

나. 남북관계

III. 동북아 정세

- 동북아시아 종합

- 미국

- 중국

- 일본

- 러시아

IV. 주요 지역 정세

동남아, 서남아, 유럽, 중동

I. 2021년 국제 정치 · 경제 개관

□ 코로나19의 국제정치 충격과 그 여파의 지속

- 국내 및 국제적 불평등 심화
 - 세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심각한 타격 ⇒ 글로벌 차원 불평등 심화
 - * 세계은행, 8,800만~1억1,500만명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 예측
 -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온 빈곤 탈피 성과 무효화
 - * 불평등의 증대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더욱 부채질
-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⇒ 민주주의 쇠퇴
 - 국가권력, 팬데믹 위기를 민주적 공간 제거 기회로 활용
 - ⇒ 권위주의와 강권주의의 부상
- 美·中 경쟁의 심화 : 군사, 경제·무역, 기술에 이어 이념 대립까지
 - 세계질서의 양극화 재촉 ⇒ 신냉전의 시작
- 자국우선주의로 글로벌 리더십 실종과 다자주의의 위기

※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美·中의 진영 경쟁 심화

□ 국제정치에서 바이든과 미국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

- 조정적 다자주의 리더십(adjusting multilateral leadership)
 - not 패권적 but 조정적, not 일방주의 but 다자주의
 -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추구(존중받는 미국 위상 회복)
 - * 바이든 “미국이 돌아왔다”..“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한다”(11.24)
- 미·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상대적 힘의 감소의 극복 필요
 - 패권적 일방주의로의 복귀(탈냉전 이후) 제한
- ① 민주주의를 비롯한 자유주의 가치의 재등장
- ②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접근

※ 트럼프즘에서 비롯된 국제환경 변화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?

※ 자유주의, 다자주의로의 유턴이 어디까지 가능할는지.....

□ 세계질서의 양극화와 ‘가치의 진영화’ 심화

- 美·中 경쟁의 가속화와 국제질서의 양극화 불가피
 - 바이든의 다자주의 → “재앙을 초래하지 않는 경쟁” 추구
 - * “경쟁과 더불어 글로벌 이슈 분야에선 협력을 추진하는 선별적 접근”
 - ※ 中의 불공정 무역·경제정책, 첨단기술·군사안보 분야 단호 대처
 - ※ 신장 위구르족 문제, 홍콩 보안법 등 인권에선 강경한 입장
- 중국의 대비 → 미국의 탈동조화에 대비한 내수기반 쌓순환 정책
 - * 중국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경제적 자급자족에 역점
 - ⇒ 미국의 중국 배제·탈중국화 대응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
 - ※ 남중국해, 동중국해, 대만, 홍콩, 신장, 티베트 ⇒ 中의 주권
 - ※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⇒ 확립된 리더십으로 단호한 대외정책 추구

⇒ 미·중 패권경쟁의 심화가 국제질서의 양극화 초래

- 미국의 Quad(美·日·호주·인도)와 韓·美·日 3국 안보 협력 강화
 - 중동지역에서의 절약, 아시아에 집중 ⇒ 역내 균형자 역할 강화
 - * 힘의 우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
- 일본 :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美·日 동맹 강화(아베 연장)
 -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다 공고히
 - * 스가·바이든 첫 정상회담서 ‘핵우산 제공’ 공동성명 추진(1.4, 연합)
- 중국 : 미국과의 경쟁 심화는 각오, 주변국과 선린외교에 노력
 - * 영토·주권(핵심 이익)엔 양보 불허, 주변국엔 경제적 이익으로 상호 협력
- 동남아 :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재인식
 - 美, 남중국해 등 中 영향력 차단위해 ASEAN과 다각적인 협력 추구
 - 美,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위해 동남아국가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
- 유럽 : 미국의 대서양 협력의 복원과 중국의 영향력 차단 주력
 - * ‘EU·미국 간 중국 대화(EU-US Dialogue on China) 출범 합의
- 중동 : 2021년 미국과 중국의 조우와 경쟁이 필연적
 - 中, 최대 단일 원유구매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한 외교·침투
 - 美,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 및 이-팔 평화 중재, 중동분쟁 해결 역할
- 중남미 : 일대일로와 미주성장 계획(America Crece)간 경쟁

⇒ 지역에서의 경쟁이 국제 규범 차원에서 미·중 경쟁 가속화

- 국제 규범(Regime) 차원에서 미·중 경쟁 가속
 - 中, RCEP 등 다자외교에서 국제규범 수립자(rule-setter)의 지위 추구
 - 美, WTO등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위한 제반 조치 강화
 - * 다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규범, 디지털 경제, 사이버 안보, 우주공간 규범 등
 - ※ 기후변화, 비확산, 테러리즘, 글로벌 경제, 금융 안정 같은 글로벌 이슈 분야의 미·중간 협력 예상 ⇒ but 경제·안보 분야 협력 제한
 - 미국의 다자주의적 접근과 중국의 일대일로 ⇒ 가치의 진영화
 - 美 다자주의 : 동맹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연대의 성격을 띤 연대
 - * 중국 배제가 가장 중요한 연대(진영화의 시작)
 - 中 일대일로 :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연대
 - * 미국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치의 연대
- ⇒ 미국의 다자적 접근과 중국의 대응 ⇒ 자유주의 vs 반자유주의
- ⇒ 가치의 진영화를 촉진시킬 개연성 높아

II. 한반도 정세

가. 북 한

□ 8차 당대회 : 대내·외 위기극복과 내부통제에 방점

- 경제발전5개년전략 실패로 내부통치 중요성 강화⇒김정은 총비서 등극
 - 노동당 규약에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유일적 지도체계 강화
 - * 김정일(영원한 총비서)의 위상에 버금가는 김정은의 위상 확보
 - * 노동당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다시 개편, 실무능력 위주의 엘리트 교체
 - “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”
 - * 대북제재, 코로나19, 수해 등 3중고로 인한 민심 달래기
 -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통한 위기극복 지향과 ‘반부패’ 강조
 - *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내부통제 암시
- ※ 대내·외적인 위기극복과 그 가능성을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
- 군사력 건설과 ‘핵과 경제발전 병진정책’ 확대 통한 활로 모색
 - 핵잠수함, 무인타격장비, 군사정찰위성,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
 - * 국방건설로 민심을 달래고 향후 북미, 남북대화에서 주도권 획득 추구
 - 강성 대남/대외정책 속의 일부 변화의 여지 남겨
 - * 對美 ‘상대적 대응론’ : ‘강대강 선대선’ 강조로 美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강조
 - * 對南 ‘조건부 관계개선론’ : 남북군사합의 준수 강조 ⇒ 연합훈련, 첨단 군사력 건설?

※ 8차 당대회 : 위기극복 능력과 가능성을 대·내외 현시(과연?)

□ 인민군 중심의 위기대응 체제 공고화, but 당 우위원칙 유지

- 노동당 규약 개정으로 총비서 김정은 유일지도체제 확립
 - 당 지도 下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에 인민군 조직의 적극 활용
 -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편, 리병철(비서) 중심의 先黨後軍 확인
- 핵보위국 위상 기반으로 핵무력 증강을 통한 대미 주도권 추구
 - * 對美 ‘한반도 비핵화 협상’이 아닌 ‘상호 핵군축 협상’ 사전 정지 작업

※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과 대미 협상을 위한 군부 용 극대화

□ 국경 폐쇄 장기화로 경제침체 심화 ⇒ 사회통제 강화

- 장마당 물가와 환율의 하락 → 민심이반의 뇌관으로 부상
 - '20년 국경폐쇄로 소비재 수입도 차단 → 적자 누적 최소화
 - '20년 10월 이후 국영상점 외환 사용 금지, 당국의 환율 개입⇒ 국경폐쇄로 무역적자 폭과 외환 고갈 속도 감소
-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비한 외환 보유량 유지 ⇒ 국경폐쇄
 - 민족적 자립경제(자력갱생)로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
 -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활로 모색, 경제관리 개선조치 성과 제고※ 밀무역과 내부통제만으로 외환위기 극복 제한, 중국의 도움 필요
-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부진 원인 분석, 내부요인 지적(8차 당대회)
 - 과도히 상향된 목표, 과학기술 역할 미흡, 경제관리체계 상의 문제※ 현실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5개년전략 ('21~'25년) 설정

□ 자립경제에 초점, 현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

- 전 분야에서 민족적 자립경제(자력갱생)의 강조
 - 대규모 투자보다 현실적, 실용적으로 경제발전 방안 모색
 -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계된 농업·경공업 발전 강조
 - * 사경제로 빠져나간 주민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
 - * 건설, 체신, 국토관리, 생태환경, 도시경영 부문에서도 재강조※ 인민대중제일주의 일환으로 인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가시적 발전 도모
- 국경봉쇄 및 대북제재를 반영한 대외경제부문 축소
 -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제외한 대외경제에 신중한 태도
 - * 건설, 체신, 국토관리, 생태환경, 도시경영 부문에서도 재강조
- 계획경제의 재정비,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
 - 국영기업망의 발전, 일원화된 통제체계 구축 등 계획경제의 부활
 - * 외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획경제 통한 효율성 제고
 - 재정·금융·가격등 경제적 공간의 국가의 통일적 관리 강조
 - * 한계 : 최근 식량생산량 440만t으로 전년대비 5.2% 감소(157만t 부족)※ 포전담당제·분조관리제 등 유지, 계획경제로 자원이용 효율 증대

나. 한반도 비핵 · 평화 프로세스

□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‘전략적 관여’ 가능성

○ 오바마 정부의 ‘전략적 인내’와 구별되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

***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반기 동안 검토과정을 통해 확정 예정**

①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후순위

• 코로나19 팬데믹·경제회복·정치적 양극화 해소·인종문제 해결에 방점
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도발 방지, 비핵화 위한 ‘전략적 관여’ 적극 추진

• 美 본토를 위협하는 북핵, 비확산·핵군축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

③ 대북외교도 Bottom-up, 제재 중시, 가치 중시의 전통외교로 회귀

• 불량국가와 대화 거부, 대화 자체가 보상..예) 이란·쿠바와 대화

④ 바이든, 군사적 옵션보다 대화를 중시 ⇒ 북미대화에 긍정적

• 이란핵 협상 경험등이 풍부한 외교안보라인(블링컨, 설리번)

※ 북한과 대화는 한다. 그러나 격식을 갖춰, 점진적으로...

□ 북한, 도발 자제와 대미 ‘전략적 인내’ 추진

○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발로 인한 몸값 올리기 자제

• '19년 신년사 ‘새로운 길’-핵실험·미사일 발사 등 자제

• '20년 10월 코로나19 채유 기원 서한 미국 전달→북미관계 관리

※ 팬데믹으로 인해 도발시 정치적 효과 감소 or 역효과 계산

○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 전망

① 북·미 및 남·북 대화포기, 내부 경제발전 및 군사력 증강 집중

*** 대외적으로 북·중 관계 강화와 교역 확대를 통한 현 정책기조 유지**

②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강화시→상황타개 위한 도발로 회귀

※ 전반기 美의 팬데믹 극복을 위해 ①, 후반기 ② 방안 예상

○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개연성

• '18년 이후 중단된 핵 및 각종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수요

•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포기 시 핵보유국 지위 강화를 위한 수단

*** '20년 당창건 75주년의 신형 전략무기 전시는 도발의 복선**

※ 바이든 행정부와 北·美 정상회담 프로세스 지속 기대..Plan B도 준비

다. 남북관계

□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불확실성 증대

- 코로나19의 안정화 우선으로 남북관계 경색 지속
 - '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와 9.22 해수부 공무원 피살
- ※ 관계개선 모멘텀 없이 '20년 경색국면 지속 예상
- 北 제8차 당대회(1월)의 대외 메시지에 따른 국면 전환 가능성 낮아
 - 제8차 당대회의 목적 ⇒ 내부단결 모색, 국내문제 집중
 -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문제 및 민심달래기에 우선
- ※ 8차 당대회 역시 남북 경색문제 해결에 큰 도움 없을 듯
-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에 따른 연합연습 시행에 북한 자극 예상
 - 3월 한·미 키 리졸브 연습의 시행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
 - '20.5 2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이 도발일정 당겨질 개연성 높아
- '22년 대선 등 '21년 하반기 국내 정치일정도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

□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남북교류 재개 전망

- 코로나19 상황 개선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심 교류 재개
 - UN 안보리,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('20.11.30)
 - '21년 의료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작 전망
 - ★ 김정은 “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남이 다시 두손 잡는 날 기원”(20.10.10)
 - ★ “北, 국제단체 통해 코로나19 백신 요청..유럽국 문의”(21.1.5, 연합)
- ※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남북간 대화와 협력 가능성 증대
- 대북제재 중 인도적 지원에 대한 패스트트랙 허용 → 긍정적
 - 코로나19 백신이 가져오는 팬데믹 종료에 대한 세계적 기대 부응
→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에 남북교류 역할 세계적 희망 제공
 - 하반기 본격 북미대화 이전 남북교류가 북한의 안정적 관리 제공
- ※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위한 남북교류가 南北美 모두 중요

□ 美 행정부 교체기 우리의 北核위기 방지와 北·美 대화 재개 노력

-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시작
 - * 대북제재가 면제되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 개시
- 북한의 핵·미사일 도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접촉 실시
 - 북한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이용한 남북관계 정상화
 - 바이든 행정부에 불량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북한 자제 요구
 -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핵사태를 불원하는 중국의 입장 활용
- 北·美 협상을 견인할 韓·美 대화 조기 시작 필요
 -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고한 남북공조 유지
 -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모라토리엄 준수 등 관계개선 성과 재검토
 - 싱가포르 北·美 정상회담 계승 등 그간 멈췄던 부분에서 시작
- 점진적인 노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·평화 프로세스 유지
 - 미·중 패권경쟁시대 북한 비핵화의 조기 실현 가능성 낮아
 - 점진적인 노력을 통한 비핵·평화 프로세스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
 - 단계적이고 절충적인 비핵화 전략으로 여러 우발상황 대비
 - * 합의후 불이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제반 우발상황 상정 계획 마련

※ **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포함하여 모든 주변 상황을 고려한 비핵·평화 프로세스 지속**

Ⅲ. 동북아 정세

동북아 종합

□ 미국의 아시아 관여(Engagement)정책 강화

- 중동에서의 개입 축소,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 부여
 - 중국과의 세력 경쟁이 미국 안보에 결정적 요인이 된 현실 반영
- ※ 더 깊은 관여와 일관된 정책으로 美 정책의 신뢰성 제고 노력
- 중국에 초점을 맞춘 군사혁신과 역내 군사력 강화
 - ‘전 영역 합동작전’(JADO)를 합동작전 개념으로 완성하고 군사력으로 구현
 - ※ 中의 반접근/지역거부(A2/AD)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 및 전력 개발
 -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무인무기체계 등 미래전력 개발 가속화
 - 중·장거리 및 다용도 미사일 개발, 해군력 중심 군사력 강화 지속
- Quad(美, 日, 濠, 印 4자 안보대화)를 준군사동맹체로 발전 지속
- ※ Quad + 3(한국, 베트남, 뉴질랜드) 편입 추진 및 내부결속 강화
- 美 중심의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역내 무역 규칙 제정 주도권 확보
- ※ 중국 부상에 대응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전략적 우선순위 강화

□ 미·중 패권 경쟁 지속, 분야별 경쟁과 안정의 추구

- 트럼프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과의 패권경쟁 유도
 - 급격한 군비경쟁을 통제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접근 차단
 - But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산업정책엔 무역전쟁 불사
 - ※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 집중
- 강화된 국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공세적인 對美 대외정책 시도
 - A2/AD능력과 군사기술 개발 박차, 장거리 군사력 투사능력 확대
 - 역내 국가 상대 경제적 의존도 확대 및 교역 규칙 제정 영향력 제고
-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일정한 안정기 복원
 - 초기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적절한 양보로 新 세력균형 형성
 - 역내 세력균형의 틀 안에서 상호 장기적인 경쟁의 추구
- ※ 美, 높은 경제·외교적 관여..中, 굴기위한 시간 및 여건 획득

□ ‘美·日’ vs ‘中·러’의 경쟁 구도 심화, but 냉전구도까지는?

- 중국 견제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美日 상호 동맹 강화 지속
 - MD·대잠작전 공동작전 강화, 초고속 미사일, 우주 분야 기술협력 확대
 - 美·日 동맹을 기초로 Quad의 準군사동맹화 가속
- 中·일간 관계개선 유지를 통한 경쟁적 관계의 안정화 추구
 - 양측, 지나친 갈등관계가 유발할 외교적·군사적 비용 최소화 공감
 - 중국, 미국과의 갈등에 일본 및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 노력 증가
- 美·러간의 갈등관계 지속 : 우크라이나 사태, 러 선거개입 연장선

※ **미러간 新전략무기감축협정(New START) 조약 갱신 가능**

- 美 견제를 위한 中·러간의 군사적·외교적 협력 지속
 - 中, 美의 견제下에서 러시아와 첨단 기술분야 협력 가속
 - 러, 對中협력으로 경제·외교적 고립 탈피 시도, but 중국의 대국화 견제

※ **美·日 vs 中·러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전술적 안정 추구**

□ 미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⇒ 지역체제 안정성 유지

-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우위 ⇒ 중국의 공격적 행동 억제
 - 현 단계에서 美中間 군비경쟁 ⇒ 중국 불리, 군사적 도전 회피
 - 미국, 日 군사력 강화도 中の 군비경쟁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통제
 - * 美, 중국에 적대감이 약한 한국의 군사력 건설로 간접적 중국견제 가능

※ **광범위한 미국의 동맹체제로 역내 군비경쟁 가능성 낮아**

- 역내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 낮아
 - 남중국해·대만해협 : 미국의 적절한 개입으로 분쟁가능성 낮아
 - * 중국을 압도하는 미국의 군사력 ⇒ 중국의 오판을 원천에 차단
 - 코로나19 등 내부에 집중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가능성 낮아
 - * 추가적 도발시 전 세계적인 경제제재 돌입 국면
 - * 바이든 행정부의 정착 시까지 한미군사대비태세 강화, 北 도발 억제

※ **美의 군사력과 바이든의 장기적인 승전전략이 역내 안정에 기여**

미국 정세

□ 국내 정치의 정파적 갈등 지속

- 사라지지 않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, 지속되는 분열과 대립
 -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승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7422만표(+1122만표) 획득
 - * 바이든 51.3%, 트럼프 46.8%로 4.5%차이로 바이든 승리
 - 흑인도 저학력 보수 성향 남성 트럼프 지지, 20%의 콘크리트 지지층
 - * “반세계화와 반엘리트로 수렴되는 분노이자 정서”(’20.12.9, WP)
 - 공화당 트럼프 지지층 이용하는 이민규제, 미국우선 통상정책 추진 예상
 -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통합 주장에 트럼프즘의 적정한 영향력
 - 바이든, 미국 사회 통합과 미국 민주주의 가치 복원이 우세
 -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주장도 일정한 영향력 행사
 - * 사상 초유 美 ‘의회 습격사건’..각국 정상 “트럼프 책임, 수치스럽다”(1.7, 한국)
 - 민주당의 상원장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확보
 - * 잔존 트럼프즘의 정책적 간섭을 일정정도 배제할 동력 확보
 -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조기 종식이 안정적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
- ※ 정파적 갈등의 혼란이 내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주목**

□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

-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잘나가던 미국 경제
 - ’19년 2.3% 성장, 실업률(12월)은 3.5%로 반세기만에 최저(CNBC)
 - 코로나19로 국내 소비시장 위축과 최저 실업률 단기간 무력화
 - * ’21년 코로나19 경기부양책 9천억\$(천조원)와 1.4조\$ 예산안 승인
 - ⇒ 내년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(인플레이션도 우려)
 - ’21년 코로나19 극복, 세계경제 5.0%의 성장률(대외경제연구원)
 - 미국 경제 ’20년대비 7.8% 상승한 2.8% 성장 예상
 - 백신 보급 지연, 코로나19 재확산, 미중 갈등 장기화 등 리스크
- ※ 천조원의 부양책으로 美 경제의 회복...인플레는???**

□ 美·中 전략경쟁 가속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노력

○ 美, 중국에 대한 경쟁·압박·협력 동시 구사

- 스마트한 중국때리기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협력(not 관계지향)
* 부분적인 디커플링, 인권문제 강조, 적절한 수준의 무역·관세전쟁 병행

○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점차 회복

-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 강화 : 동맹회복이 최우선 외교
- 동맹을 통해서 코로나, 중국,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콘트롤
* 자유세계와 단합하여 독재정권 견제...중국, 기후변화 등 콘트롤
- Quad와 NATO 등 글로벌 동맹을 이용한 중국 견제
* NATO 2030보고서('20.12.1) : “中, 유럽의 직면한 위협”

※ 신냉전 위한 진영구성이 아닌 장기·전략적 對中 경쟁 추구

※ 동맹과 Regime을 통한 대중 전략적 우위 추구 (新자유주의)

□ 방위비 분담금 등 韓·美 간 현안 신속 합의 노력

○ 동맹회복의 걸림돌 ⇒ 트럼프의 동맹의 달러 보상化

- 현재 협상('20년 봄) : 한국 13% 인상 vs 트럼프 50% 인상
- 바이든, 동맹을 달러가 아닌 정치적 연대로 보상 요구 예상
*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전제조건 미국의 글로벌 동맹 회복

- 한국안과 4~5년 다년계약으로 방위비특별협정(SMA) 마무리 전망

○ 충분한 검증을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 : 기본입장

- '21년 2단계, 3단계(FMC:완전임무수행능력) 검증평가 마칠지 의문
* 에이브럼스 “2년뒤 전작권 전환? 시기상조..갈길 더 남아”(연합, '20.11.20)

※ 한미 동맹, 방위비보다 더 복잡한 연루와 방기의 위험 서서히 대두

□ 대북제재 유지 통한 북한 비핵화 유도 전망

○ 단호하고 원칙적인 외교를 강조하는 대북정책 견지

- Top-down·일괄타결보다 단계적 협상 추구(이란 핵협상)
* 바이든, 국무부 부장관에 북한 전문가 웬디 셔먼 지명할 듯(1.7, 연합)
-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, 이란 핵합의 미 협상단 실무 총괄

○ 대북제재에 기반하여 다자적 접근으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유도

- 6자회담의 어려움과 실패,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불신 검증의 어려움 등 난제

※ 전반기 코로나19, 통합 등 내부문제 선 집중 후 북한 문제 접근 예상

중국 정세

□ 코로나19의 통제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

○ 코로나19 통제와 중국 정부의 통치력 강화

- 코로나19 진원지 및 초기 피해 극복 ⇒ 정부의 권위 강화
 - * 중국도 백신 접종 개시..“300만회분 이상 접종”(1.5, 서울)
 - * 확진자 63명(1.7), 세계 82위, 한국 88위(1.7, Worldometer)
 - ※ ‘국난 극복’ 여론 형성→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선전
- ’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 : 소강사회 실현 첫 번째 목표 달성
 - * IMF, ’20년 중국경제성장률 2.2%, ’21년 8.2%(news1, ’20.12.28)
 - * 아편전쟁 이후 ‘굴욕의 100년’을 극복한 사회주의체제 선전 강화
- 당과 당 영도의 중요성 강화 ⇒ 당치(黨治)의 전면적 내실화

○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권력 공고화

- 시진핑 3연임(’23~’27) 보장, 당 주석직 부활 논의(5중전회, 10.10)
 - * 내부지향(자립·자강)과 미·중 대결에 대응위해 시진핑 권력집중 불가피

※ 공산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내·외 도전 극복

□ 내수 기반과 대외경제 순환의 “쌍순환 정책” 통한 경제발전

○ 양신일중(兩新一重)을 통한 코로나19 극복

- ’20년초 코로나19와 무역분쟁으로 1/4분기 -6.8%의 경제성장
 - * 양회(정치협상회의·전인대)에서 ’20년 경제성장률 목표도 미발표
- 양신일중 : 新형인프라, 新형도시화, 重要프로젝트 건설
 - *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, 인프라 투자 ⇒ 대규모 내수 진작
 - * 신형인프라 투자만 1.2조위안(약289조원) 5년간 직접투자만 10조위안
- ※ 2분기 3.2%, 3분기 4.9%, ’20년 2.2%의 경제성장률 달성

○ 양신일중의 양면, 복병인 부채의 증가: 디레버리징 노력의 퇴조

- 중국의 무한한 자금공급은 경제성장 견인 vs 부채의 증가 ⇒ 디폴트 걱정
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신일중, 중국의 디레버리징 노력 무색화
- ※ 딜레마, 코로나 극복은 양신일중, 경제체질 개선엔 디레버리징

○ 미국과의 무역전쟁 극복위한 “쌍순환 정책”

- 미국과의 무역전쟁 ⇒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
- 내수에 기반으로 한 내부대순환을 경제정책의 기본
- 내부대순환에 상응하는 대외경제 순환 체제 구축

※ 경제의 내·외 순환이 서로 호응·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

○ 또 다른 순환 : 내부대순환에 필요한 금융부분의 개방과 외자 유치

⇒ 중국 경제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 내부순환 위한 보조

- 내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기술혁신 및 자립
 - * But 경제적 쇠국이 아닌 대규모 외자 유입을 통한 경제의 내부 대순환
- 불공정 무역 관행, 금융개혁 등의 미국 등 서방의 요구에 소극적
⇒ 美·中 및 서방·中 간의 디커플링 현상은 광범위하게 진행 전망

※ 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도 양립하기 어려운 ‘쌍순환 정책’

⇒ 중국,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주도권 확보 추구

* WTO 개혁 문제가 미·중간 갈등의 핵심으로 등장할 개연성 매우 높아

○ 단기적으로 미·중과의 합의를 통해 시간벌기 노력

* 美·中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적당한 타협점 찾으려 상호 노력

※ 단기적인 협력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중국

□ 대안적 질서 모색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산 시도

○ 코로나19가 촉진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‘신형 국제관계’ 지속

- '17년 19차 당대회 이후 親誠惠容을 통한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
 - * 일대일로(舊 신실크로드 경제벨트, 21세기 해상 실크로드) 추진
 - * 정치적으로 다극화하는 세계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위상 확보
 - *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항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서 주도권 확보
- '20년 코로나19 중국책임론, 홍콩보안법, 위구르족 사태 극복 위해 적극 외교
 - * 전랑외교(戰狼外交: Wolf Warrior Diplomacy)를 통한 공세적 외교 시도
- 미국 및 서방에 비견되는 경제모델, 정치체제,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 적극 모색
 - * 아프리카,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역·보건물품·인력 지원으로 호감도 상승
- '21년 코로나19 통제와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외 영향력 적극 확대 시도

※ 코로나19와 인권문제로 더 강력해지는 중국의 신형 국제관계

⇒ 서방의 반중국 감정에 좌절하지 말고 더욱 더 공세적 외교 추진

-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응한 중국의 레짐 연대 강화
 - 장기적으로 미국의 진영화에 대비한 중국의 또 다른 진영 형성
 - * **상하이협력기구, BRICS, 일대일로 연대국가, 아프리카·중남미 국가와 연대**
-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략적 경쟁 ⇒ 핵심이익 수호, 2차 피해 회피
 - 남중국해, 홍콩, 신장위구르, 양안관계에 대해 미국과 양보 없는 대치 불사
 - * **영토 및 주권 관련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**
 - 핵심이익 관련 2차 피해 불식위해 주변국에 경제적 유인책으로 접근
- '21년 영토분쟁이 포함된 주변국 외교의 도전
 - 인도와 라다크 지역 분쟁과 같은 중국과 인도의 갈등 계속
 - 일본과의 동중국해 문제 관련 갈등
 - 홍콩보안법 등 인권 문제 관련 호주, 뉴질랜드 등 자유진영 국가와 갈등

※ 또 다른 백년을 위해서 사활적 이익의 포기는 절대 불가

□ 美·中 갈등 속 韓·中 협력 확대 모색

-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한 한중 협력 확대 모색
 - '20년 하반기 중 주요 외교인사 방한과 한중 막후 협력 가속
 - * **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부산 방문(8월)**
 - * **왕이 외교부장 방한, 대통령·국회의장·외교장관 회담(11월)**
 - 미국의 전략적 압박과 중국 배제에 따른 中의 주변국 관계 강화
 - * **'20년 RCEP 서명 이어 '21년 韓·中·日 FTA 체결 가시화**
 - * **4차 산업혁명 관련 미·중 경쟁이 또 다른 韓·中 관계 도전 요소**
 - ⇒ **美, 한국에 對中 디커플링 시도 → 中, 한국에 대한 협력 구애**
-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 : 한국과 군사·안보 분야에서의 긴장
 -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노력 → 동맹에서 연루의 위험
 - * **남중국해 문제, 'Quad +'의 참여, Thaad 추가 배치 등**
 - 미·중간 인권문제에 대한 이념과 가치의 대립 → 연루의 위험
 - * **대만, 홍콩,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**

※ 韓·中간의 도전, 미중간 패권경쟁과 전략적 선택?

일본 정세

□ 아베 색채를 벗어난 제2차 스가 내각의 출범 가능성

○ 스가 내각의 탈 아베의 과제

- 아베의 장기집권 피로감과 레임덕으로 들어선 스가 내각
 - * 코로나19, 도쿄 올림픽, 경기침체, 미·중 경쟁 속 관리
 - * 아베 내각의 대·내외 정책 계승, 방역 및 경기활성화 추구
- 코로나19, 경기 활성화,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위기관리 집중
 - ⇒ 꾸준한 정책 성과를 통해 정권 재창출 실현이 과제
 - *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후하여 총선거 가능성 증가

○ 스가 정권의 재창출 가능성 판단

- 긍정적 요소 : 포스트 스가의 부재,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현 상황
 - * 자민·공명의 연립정권에 대한 대안 세력의 부재도 긍정적 요소
- 부정적 요소 : 코로나 사태의 지속, 경기 활성화 불안, 도쿄 올림픽
 - * 1월 중순 현재 일일 7천여명의 확진자 발생,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

※ 코로나19의 극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스가 내각의 향배

□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활성화에 방점

○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정부의 위기상황 봉착

- 코로나19로 인한 '20년 경제성장률 - 5.6%, 경기부양책 지속
 - * '21년 1/4분기, 비상사태 선포로 -2.4%, 실업자수 8만명, 더블 딥 예상
 - * 코로나19 경기활성화 2차례 57조엔 국채 발행, 국가채무 GDP 2배
-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도 코로나19 극복부터
 - * 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의 거시경제 활성화 정책 + 경제구조 개혁 추구

※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극심한 경기침체 전망

○ 코로나19 사태로 7월 올림픽 개최 전망 불투명

- * 취소 시 경제적 손실 및 올림픽 특수로 인한 경기 활성화 물건너 가

○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디커플링으로 수출에 막대한 손해

※ 코로나19 백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스가 내각의 운명

□ 美·日 동맹 강화, 中·日 관계의 관리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

- 중국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美·日 동맹의 강화
 - Quad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인도·태평양 전략의 구심점 자처
 - 센카쿠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더욱 공고히 유지
 - * “일본, ‘핵우산 제공’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”(1.4, 산케이)
 - * 현 위기극복을 안보면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해결 노력
- 對중국 : 중국 견제와 중·일 관계의 병행
 - 코로나19 방역 분야와 도쿄 올림픽 개최 등 협력관계 모색
 -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, 동중국해 및 센카쿠 문제 등 협력 소요 증가
 - ⇒ 시진핑 주석의 방일 통해 중·일 관계의 발전적 협정 주목
 - * 미일동맹과 대중국 외교의 딜레마 봉착 개연성 증가
- 對러시아 : 평화조약 체결을 두고 교착 국면 이어가
 - 쿠릴열도/북방영토 문제 교섭 및 시베리아·극동 지역 경제협력 추진
 - 북방 2개 섬 반환으로 축소했으나 러시아 강경입장
 - * 계속되는 협상에 비해 결과는 미지수
- 對북한 : 올림픽 참가를 모멘텀으로 한 납치문제 해결 노력
 - * 북미회담 정체 올림픽 개최여부 불투명으로 대립 국면 가능

□ 과거사 문제로 인한 韓·日 간 갈등 국면의 관리

- 과거사에 발목 잡힌 한·일관계 지속
 -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금 지급(일본제철, 각 1억원)관련 대립 지속
 - *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보상 판결(1.8)로 설상가상
 - 日정부의 한국 내기업 압류 자산 매각시 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
 - * 한국산 수출품 보복관세, 일본제품의 공급 중지, 비자 발급 제한 등
 - * 한·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감은 있으나 현실적인 시간 필요
- 바이든 정부 출범과 중국 견제 위한 한·미·일 삼각 안보협력 중시
 - 한·일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 개입 개연성 높아
 - 도쿄 올림픽 개최와 민간 협력, 올림픽 계기 북·일 회담이 전환기

※ 코로나19와 올림픽 개최 위해 일정한 수준의 협력관계 복원

러시아 정세

□ 총선 결과에 따른 푸틴 장기 집권 구도 안착 가능성 주목

- '20년 개헌을 통한 푸틴의 정권 연장 가능성 증가
 - '21년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푸틴과 집권세력의 시금석
 - * 개헌으로 '24년 임기 종료 후에도 6년 임기의 연임 두 차례 가능
 - * '20.7.1 개헌투표에서 68% 투표율과 78% 찬성 획득
 - 경제발전을 통한 정권의 지지도 유지에 총력
-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회복 가능성 불투명
 - '20년 경제성장률 - 4%, '21년 2.6%, '22년 3% 전망(IMF)
 - 저유가와 세계적인 가스 수요의 감소로 러시아 재정의 큰 위기
 - EU 등 러시아 '크림반도 합병' 러시아 제재도 7월까지 연장
- '21년 총선에 푸틴과 집권세력의 명운 갈릴 전망
 - '20년 8월 나발니 독살 시도사건 → 반정부성향 유권자 자극
 - 푸틴 지지위해 코로나19 통제 및 경제발전의 가시적 전망 필수
 - * 기존 서방의 제재에 정치적 암살 사건으로 개별 제재도 시행

※ 개헌은 했으나 국내·외 악재로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 필요

□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러시아 압박과 '냉각된 안정화'

- 바이든 대통령 “러시아는 주적”
 - 바이든,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와 대러 경제제재의 주역('15년)
 - 민주당내 트럼프 당선 위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 등 반러감정
- ※ 트럼프의 대중 견제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희망 물 건너가
- 바이든의 대외정책으로 예상되는 對러시아 충돌 국면
 - ① NATO의 강화, ② CIS 국가 개입, ③ 러 야권 통한 푸틴 압박, ④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동에 미국의 복귀 등
- 돌발적인 트럼프와 다른 바이든의 협상 기반 외교 → 냉각된 안정화
 - '21년 New Start(新전략무기협정) 체결 전망

※ “러시아는 미국과 신냉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”(러 언론, 美 대선 후)

□ CIS, 유럽, 중동의 친서방화 견제

- 일부 CIS 국가들의 정치 변혁과 친러시아화 정책 시급
 - 몰도바 : 유럽화를 지향하나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희망
 - 키르기즈스탄 : 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하야, 1월 대선
- ※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 시 美·러간 갈등 관계로 발전
- 러시아와 NATO의 완충지대의 친서방화 방지에 사활적 이익
 - 벨라루스 : 시민혁명 억제 친러 독재자 루카센코 정권 유지
 - ※ EU와 미국은 NATO와 완충지대인 벨라루스의 야권 후보지지
 - EU, 나발니 사건 등 푸틴의 정적 암살 시도에 反푸틴 성향 확고
- ※ 벨라루스의 친서방화는 러시아 사활적 이익의 위협
- 재개가 불투명한 독·러 직통가스관사업(Nord Stream II)
 - ※ 독일의 요청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입장 명확
- ※ 독일을 매개로 한 러시아의 유럽 침투 개연성 낮아
-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복귀 ⇒ 러시아와 경쟁 재개
 - 글러벌 리더십 회복을 노리는 미국에 러시아의 확장 주춤
 - ⇒ 미국의 무관심으로 강화된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 예상
 - ※ 미국 중동복귀는 국내문제 해결 우선으로 '21년에는 가능성 낮아
- ※ 초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선언에 긴장하는 러시아

□ 韓·美·日 vs 北·中·러 대결구도 개연성

-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시절 '중국은 경쟁자, 러시아는 주적' 발언
 - 美의 反중, 反러 정책→러·중의 밀착과 북·중관계의 긴밀화 심화
 - 북미관계의 경색→北, 중국과 러시아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
- 바이든의 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 추구
 - 동북아에서 韓·美·日 삼각 협력관계 회복
 - 인도·태평양에서의 Quad의 準안보동맹화
- ⇒ 한·미·일 vs 북·중·러의 신 냉전 진영 구성 개연성 증가
- ※ 미국의 중국·러시아 동시 압박에 대비한 유연한 외교 필요

IV. 주요지역 정세

동남아시아

□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ASEAN 관계 강화

- 美, ASEAN 주도 각종 다자협력체제에 적극적 참여
 -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 참석 유력
 - 미국의 駐ASEAN 대표부 역할도 정상화
- ※ 美, ASEAN과 외교·군사안보·경제적 협력관계 심화 전망
-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위해 강력한 외교적·군사적 압박 지속
 - 남중국해 행동규범(CoC) 제정시 법적 구속력과 3국 이익 보장 강조
 - 中 일대일로 대응 위해 ASEAN 국가들에 경제 인센티브 제공
-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가 일부 ASEAN국가 정권과 충돌 가능
 - * 군부정권 태국, 마약전쟁에서 인권문제 필리핀, 장기독제 캄보디아, 로힝야 등 소수민족 문제의 미얀마, 공산당 일당독제 베트남·라오스

※ ASEAN에 “America is Back“...기대와 우려의 교차

□ 군부정권의 태국,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

- '14년 뿌라웃 육참총장 쿠데타로 집권, '19년 개헌 및 총선 승리
 - 야권의 강제해산 등으로 왕실과 군부통치 반대 세력 집단반발 및 시위
 - * '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방콕에서 수개월째 대규모 군중 시위
 - 야권 및 시위대, 뿌라웃 총리 퇴진, 헌법 개정, 왕실개혁 요구
- 여당, 개헌위해 ‘국민화해위원회’ 구성 제안, 민간단체 불응
 - 전망 #1 : 친위 쿠데타를 통한 여권의 기득권 수호
 - 전망 #2 : 민주화 요구 받아들여 총리 퇴진, 개헌, 왕실개혁

※ 극과 극의 전망 속에 코로나19도 태국 정세 매우 불투명

□ 야합의 원흉 말레이시아 총리 교체 가능성

- '18년 통일말레이국민조직(UMNO) 부패로 야권연합 총선 승리
 - '20년 고령의 마하티르 야권연합 대표 국왕에 사임, 후계자 지명 요청
 - 국왕, 전 UMNO 부총리인 야신을 총리로 임명
 - * 국왕의 의회 다수세력 인정에 야신 UNMO세력과 야합하여 다수지지
 - * 의회의 지지확보 결과 안와르, 야신 총리에 -2명 격차 → 치열한 경쟁
 - 야신 총리, 불신임 벗어나기 위해 국왕에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요청
⇒ 국왕, 비상사태 선포 거절
- '21년 야신의 총리직 유지 or 총선으로 정권교체, 난망
 - 총선으로 의회 과반을 자치하기 어려운 야신 총리의 버티기 예상

※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을는지....

□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필리핀 2022년 대선 전망

- 두테르테 대통령 '22년 6년 임기 종료와 차기 대선 구도 부상
 - 아버지의 지지율(91%, '20.12) 등에 업은 딸 사라 디바오 부상 전망
 - * 복싱 영웅 파퀴아오, 필리핀 여당 민주필리핀당 대표로 선출(20.12.2)
- '21년 두테르테의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시 안정적 정권교체 불망
 - * 현재도 건강문제로 공식 일정에 상당한 차질 발생
 - 권력승계 1위 부통령이 두테르테를 반대하는 야권 세력의 구심점
⇒ 필리핀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 불가피

※ 현대통령의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호불호 극심하게 갈려

□ 싱가포르, 권력승계 불명확

- 70세의 리셴룽 총리에게서 부총리 헝스위킷으로 권력이양 연기
 - '20년 정권이양 약속 코로나19로 당분간 미뤄져
 - 야당의 사상 최대 의석확보(93석 중 10석)로 역학변화 이뤄져
 - * 인민행동당의 헝스위킷 부총리의 승계가 유력시
- 리관유(리셴룽 父) 가문의 제3대 권력승계 등 변수
 - * 연기된 권력승계와 의회·인민행동당내 역학구도 변화 권력이양 변수 작용

※ 코로나19 통제이후 집권당내 역학구도 변화에 주목

서아시아

□ 미국·인도 간 인도·태평양 협력 강화 지속

- 트럼프·모디 정부간 구축된 인도·태평양 연대 제도화 기반
⇒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 간 협력 틀 지속
 - Quad의 準동맹화, 美·印 외교·국방장관 2+2회담 지속,
 - 美·印 간 통신 호환성 및 보안협정,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 발전
 - 중국의 국경선 위협으로 인도의 Quad와 군사·안보 협력 강화
-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와의 밀월관계가 예상되는 주된 요인
 - 바이든 대통령, 상원의원시절부터 인도와의 협력관계 적극지지
 - * 美·印 군사교류양해각서 및 인도, 국방 파트너 지위 부여('16년)
 - * 중국 견제위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지지('01년)
 -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와 中·印간 국경분쟁
 - 미국과 인도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자들의 상호 협력 중요성 인정

※ 對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인도

□ 인도와 중국 국경분쟁 이후 인도의 대중국 견제전략 강화

- 라다크 지역 갈완계곡 군사충돌('20.5)이후 對中 안보위협인식 증가
 - '17년 도콜람 사태 이후 충돌 재발, 인도군 20여명 사망
 - * 수차례 군사·외교 회담에도 통제선을 두고 군사 대치 및 긴장 지속
 - 국경분쟁으로 인도 내 반중 감정 폭발 ⇒ 중국산 불매운동 확산
 - 인도의 인도·태평양 전략 및 Quad에 적극적 동참 계기
-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포용적 관여보다 전략적 균형 추구
 - 미국의 인도·태평양 전략을 수렴하여 대중국 견제 시급
 - 신동방 정책(Act East Policy)으로 美·日 등 서방국가와 협력 강화
 - * 호주와의 연합군사훈련 및 Quad 4개국 외교장관 회의 등 적극 참여

※ 對중국 전략적 균형을 위해 Quad에 적극 참여하는 인도

□ 인도 內 힌두민족주의 확산과 모디 정부의 중앙 집권적 지배 강화

○ 힌두민족주의 정체성인 힌두트바(Hindutva) 강화

* 힌두트바 : 무슬림·기독교인에 의한 식민자화를 반대하고 힌두교도의 권익을 옹호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

- 국민, 잠무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조치가 모디 정부의 가장 큰 단일 성과 지지
- 인도인 50%가 무슬림 차별 성격을 가지는 시민권 지위 수정안 지지

○ '21년 4개 주로 시작하여 '23년까지 10개주의 지방의회 선거

- 여당, 힌두민족주의 및 지역 정당과의 연대 등으로 승리 견인
- '24년 인도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총력

* 코로나19 대응 구제 경제 패키지 지급, 가난한 주 지원 강화

* 중국·파키스탄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

※ 집권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동맹의 인기 지속 전망

□ 인도, 코로나19 이후 자립경제 구축을 통한 경제회복 추진

○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경제 상황 악화 및 '21년 경제 회복세

- '20년 경제성장률 -7.7% 전망(인도중앙통계청, 1.9)

* '20년 2분기는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한때 -23.9%의 경제성장

- '21년 경제성장률 9.5%로 가파른 경제회복 및 성장 전망

○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경제 상황 악화 및 '21년 경제 회복세

- 내수지향적 국내경제 정책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보수적 접근
-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GVC 재편을 활용 수입대체산업 육성

* 수입대체 국내 제조업 집중 육성

-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 등 해외기업 적극적인 유치 추진

*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로 해외자본과 기술의 적극적으로 유치

○ RCEP 탈퇴와 같이 인도의 보호 무역주의 지속 전망

※ '21년 국내산업의 육성과 해외 자본·기술 유치로 경제회복 전망

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의 진전

-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EU국가간 협력 증진
 - 유럽,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, 의료시스템 붕괴
⇒ EU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적 대응 소요 증가
- EU, 경제부흥 위해 1조740억유로(약1,472조원) 규모 다년간지출예산 확정
 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가에 별도의 7,500억 유로(1,030 조원) 지원
* 회원국의 긴축 재정 요구 없이 경제회복기금 지급 예정
- ※ EU 회의주의 및 反EU 극단주의를 불식하는 EU 재정 통합의 큰 진전
- '21년 경제활성화 위해 그린딜, 디지털 경제, 유럽 위상 강화 등 시도
 - 노동·환경·인권 등 EU의 가치와 이익 수호위해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 전망
- '21년 총선·대선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권당 약세 전망

※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을 건 EU

□ 중국과의 갈등 심화와 對中 공세적 전략으로의 전환

- EU, '20년 對中 전략의 전환 “中, 경제적 경쟁자와 체제적 라이벌”
 - * WTO 규칙 개정 통해 사실상 중국 보조금문제 해결에 연대(1.14)
 - *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(중국) 투자 심사 규정 적용(10.11)
 - * 중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5G에서 화웨이 점진적 퇴출 의결(1.29)
 - * 홍콩보안법에 반대하여 中에 EU의 민감 장비·기술 수출 제한(7월말)
 - * 英·佛·獨,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(7월)
- ※ 중국에 대한 체제적 회의론이 공세적 대중정책으로 발전
- '21년 중국의 침투에 대해 EU 단일시장 보호노력 심화
 - EU·중국 투자 협정 타결은 홍콩보안법 이행 방식과 연계
* 중국이 EU의 정치·경제적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 시 對中 공세 약화 가능
 - 코로나19로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나 EU 시장 보호 노력도 심화
 - 홍콩보안법 관련 인권침해와 유럽시민 적용 시 중국 제재 발동 가능
- 反中 정책으로 EU를 탈퇴한 영국과 EU의 공조 가능성 증대
 - * 英·EU, 외교·안보 정책에서의 공조 및 협력 증대 가능성 상존

※ 체제적 이질성에 따른 EU의 對中 공세적 전략 유지

□ 미국 新행정부의 대서양 협력의 부활

- 트럼프 행정부와 EU와의 반목 해소 노력 강화
 - NATO 회원국 방위비 증액 문제, 독일주둔 미군 감축 등
 - * **트럼프, GDP 2% 이상 국방비 지출 요구, 독일주둔 미군 약 1만 명 감축**
 - 트럼프, G7을 G11 or G12로 개편 추진(러시아 포함문제로 EU와 반목)
⇒ 바이든 행정부 유럽과의 다자협력 적극지지 전망
 - * **특히, 통상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통상질서 개혁에 협력**
 -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과 EU의 전략적 협력 강화
 - EU·미국 간 중국대화 설립 합의('20.6월)
⇒ '21년 경제·외교 분야의 중국 문제에 EU·미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
 - * **중국의 부상이 대서양 동맹의 도전 과제로 인식('19.12 NATO 정상회의)**
 - 獨·佛 중심의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⇒ 대서양 동맹의 장애
 - 안보·방위 분야를 넘어 전 영역으로 확대
 - 유럽의 목표 : 패권경쟁에서 美·中에 휘둘리지 않는 위상 확보
⇒ 인도, 호주, 일본, 한국 등 유사 입장 국가와 협력 강화
- ※ **다극적, 다원적인 국제정치 체제의 모색**

※ EU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서양 동맹의 복원이 아닌 자율성 확보

□ 대중 견제 위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

- 대중국 전략적 견제 위한 EU, NATO, 개별 국가의 연대
 - 다양한 채널로 亞·太 국가와 미·중 관계 악화 및 대중 견제 도모
 - * **외교를 통한 중국 이슈를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공감대 형성 노력**
 - 다원주의 국제질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亞·太 국가에 접근
 - * **한국, 동일한 입장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유럽과 협력 심화 가능**
 - 글로벌 통상·홍콩보안법·남중국해 등 韓·유럽 협력의 주요 이슈
- 경제분야도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亞·太 국가에 접근
 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과 협력을 대신할 한국의 위상 중요
 - 한국과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 회복 시도

※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에 亞太지역, 특히 한국 주목

□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중동정책 재정비

-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 상당 부분 복원
 - 바이든 행정부의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외 전략 의지
 - * “일관성 회복, 외교 강화, 파트너십의 회복과 재편”
 - ‘이란 핵합의’(JOPOA)의 복귀 시도, 이·팔 양자 평화 합의 독려
 - 철군 유예 및 일정 조정을 통해 중동 관여 정책 지속
- 오바마 시절 외교 정책 참모진의 복귀 ⇒ ‘오바마 오마주’
 - 국무장관 블링컨(국무부 부장관),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(부통령 안보보좌관)
 - * 다니엘 베나임, 다프나 렌드 등 오바마 시절 실무자 대거 등용 예상

※ 바이든의 중동정책 = 오바마의 중동정책의 연속

□ 코로나19 이후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존재감 상승

- 中 원유시장 최대 단일 구매국가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
- 중국의 공세적인 보건 의료 ‘건강 실크로드’, 보건·방역 지원 지속
 - * 코로나19로 어려운 美·유럽의 지원 대신 중국의 적극 지원과 개입
-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인한 걸프 왕정의 압박감
 - 사우디 등 왕정국가의 비민주성으로 미국의 안보지원 약화 우려
 - ⇒ 위험 회피(hedging) 차원으로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고려 가능

※ 중국의 중동진출 가속화로 미·중 패권경쟁의 심화

□ 이란 핵합의(JCPOA)의 복원에 최대 변수, 이란 정국

- 이란 정국의 급격한 보수화와 이란 대통령 선거(’21. 6월)
 - ’20년 총선에서 보수파 압승 ⇒ ’21년 대선 보수파 승리 전망
 - ⇒ ’21년 대미 적대 노선 견지 시 JCPOA 복귀 난망
 - 美, 이란 중도파 입지강화 위해 조기 물밑 대화 시작 전망
- JCPOA 복귀의 숨은 장애물
 - 이란,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파기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
 - *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기지 사이버 공격, 핵과학자 암살 포함
 - 이란의 중동 시아파 테러단체 지원에 따른 미국내 반대 여론
 - 이스라엘, 사우디 등 美 동맹국들의 반대

※ 이란 핵합의 복원에 협상과정에 지루한 공방의 재현 개연성 높아

□ 걸프 왕정 국가의 아브라함 협정 지속 추진(사우디?) 전망

-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(Abraham Peace Accord) 지속
 - '20년 UAE, 바레인, 수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로 시작
 - 저유가, 이란의 부상, 반정부 단체 발호, 왕정 유지 등 국가존속 문제
⇒ 미국·이스라엘과 연계한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
- 이스라엘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연계된 걸프 국부펀드에 공동 투자
- 이스라엘과의 반이란 전선을 구축 이스라엘 정보자산을 동원 보장
 - * 이란 및 이란 지원 시아파 테러단체, 자국 반정부 단체 정보 활용

※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의 비난 불구 왕정의 존속위해 '이'와 협조

□ 터키의 공세적 팽창주의 전략 심화

- 新오스만주의에 기반한 터키의 지역 패권국 부상 의지 지속
 - '푸른 조국 독트린'에 입각한 오토만 제국 제해권 회복 추구
 - * 카타르에 기지 완공하여 해군 여단급 규모 상주 전망
 - * 리비아에 4개 기지를 구축, 시리아·이라크에도 군시설 확충
- ※ '23년 로잔 조약 100주년 맞아 1차 대전 치욕의 역사 정리 의지
- 新오토만주의 걸림돌 : 경제력, NATO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고민
- ※ 공세적 팽창주의의 지속으로 안보·경제면에서 내상이 깊어져

□ 테러 확산 우려 점증

- ISIS 패퇴이후 중동 각국가에 지부 형식의 테러활동 활발
 - * 시리아·이라크의 잔당, 리비아, 아프간의 지부, 그리고 FTF의 복귀
- 코로나19 방역 집중으로 대테러작전 활동 감소 ⇒ 테러조직 부활
-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심해지는 경제난과 사회불만 ⇒ 테러 확산
- ※ 중동 뿐만아니라 FTF에 의한 서방의 소프트 타깃 테러 가능성 높아